

“유류세 폐지로 경제위기 돌파해야”

일자리 예산 26조원 · 유류세 5년간 연평균 세수 약 27조원 유성업 의원 “효과없는 일자리 예산 대신 당장 유류세부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업(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은 작년 기준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 넘는 55%가 세금이었다며, 유류세 폐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OPINET)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82.96원이었고, 이중 55.13%에 달하는 872.66원이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를 포함한 것을 일컫는데, 최근 5년간 이로 인한 세수는 연평균 27조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고급휘발유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OECD 23개국 중 9위에 해당하고, 세금비중이 49.8%로 20위로 매우 낮은 편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틀린 주장이다. 고급휘발유는 우리나라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3% 수준의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세금비중은 55%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우리처럼 보통휘발유를 쓰는 뉴질랜드와 일본, 캐나다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가 되기도 한다.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자동차 운행이 늘어나 미세먼지 배출량 등 환경

의 저해요인이 늘어나는 주장도 있으나, 한 연구에 의하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즉, 가격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유류세가 너무 많다보니, 1인당 GDP 대비 휘발유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제품의 55%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상승하여 소비가 증진되고, 이는 결국 기업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면서,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경기하락과 실업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도 일자리 예산 26조원을 감축하고, 이 재원으로 유류세를 전면 폐지하여 작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태풍 피해 지원 최선...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이낙연 총리,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폭력사태 법 따라 처리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일 한반도를 휩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소홀함 없이 지원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태풍 미탁 피해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에 모두발언에서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당하신 모든분들께 마음을 위로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태풍 미탁이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특히 인명피해가 참으로 많았고 재산 피해는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을 만큼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인명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성의있게 지원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유가족들께 소홀함이 없게 모셔 드렸

으면 한다”며 “재산 피해는 조사를 서둘러서 그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부산·포항·울진 각 2명, 성주·영덕·삼척·강릉 각 1명 등 전국에서 총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4명이 실종됐고 8명이 다쳤다. 전국적으로 이재민은 446세대, 749명이 발생했다. 주택과 상가·공장, 농경지 등 피해도 3267건이 접수됐다.

이 총리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돼 과주·김포·연천, 특히 과주에 여러 건의 양성 확인이 나왔다”며 우려와 함께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에 긴가민가했었던 비무장지대(DMZ) 뱀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다”며 “북한이 지난 5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처음으로 신고한 직후,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DMZ 뱀돼지였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뱀돼지 포획 또는 퇴치, 진반 금지를 포함한 지침의 이행 여부는 물론, 다른 방역들도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농식품부등 관계부처, 그리고 현장의 지자체가 특별히 잘 점검해 주셔야 한다”며 “우리의 방역대책을 다시 다잡아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 보수단체 집회에서 있었던 폭력사태와 여가자 성추행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폭력을 포함한 불법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어느 집회건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정부, 가축방역시스템 연계 불법축사 전수조사 실시

정부가 불법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4일 행정안전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범정부대책지원본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까지 합동으로 불법 축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남은 음식물(잔반) 급여와 축사·축산차량 소독, 외국인 근로자 관리, 뱀돼지 불법 포획·퇴치 등 전반적인 축사 운영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태풍 미탁 피해 및 ASF 방역상황 점검회

의’를 주재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실시간 가축 및 농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가 운영 중인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연계 가동하기로 했다. /뉴스



삼척 태풍 피해 현장 찾은 이낙연 총리.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양호 삼척시장 등과 함께 태풍 ‘미탁’ 피해 현장인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와 초곡마을을 방문해 피해지역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73억 초과지급... 환수율은 3분의 1에 그쳐

윤일규 의원 “정부, 해외출생 아동 체류여부 제대로 파악 못해”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복수 국적 등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아동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이 73억 원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양육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현황’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환수 결정된 경우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835건이었다.

환수 결정액만 73억2513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환수된 금액은 25억 7857만원으로 환수율은 35.0%에 불과

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중인 취학 전 86개월 미만 모든 원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양육수당 도입 당시엔 해외 체류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했으나 해외 체류국 이중 수혜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부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아동에만 지급이 중단됐다.

문제는 정부 시스템상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 국적 아동이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하

면 해외 체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수당이 초과지급됐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 해외 장기 체류 아동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까지도 해외 출생 아동의 체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윤일규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을 초과해 청구한 황당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초과 지급액을 조속히 환수하되, 불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

3MW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개시율 고작 6%... 전기위원회 ‘묻지마’ 허가 여전

3MW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각종 인허가 지연과 주민수용성 문제로 인해 여전히 허가만 받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 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현재)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는 2015년 69건, 2016년 101건, 2017년 81건, 2018년 90건, 2019년 현재 79건으로 총 420건의 허가가 이루어진 반면, 사업 개시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6건, 2017년 4건, 2018년 1건, 2019 0건으로 총 25건에 그쳐 사업 개시율이 고작 6%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량을 기준으로 총 20,691MW 중 368MW로 1.8% 수준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73건으로 가장 많은 허가가 났지만 사업 개시는 5건으로 개시율은 2.9%에 그친다.

해상풍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5년간 19건, 총 2,921MW가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사업 개시는 단 1건도 없다.

3MW 초과 발전사업자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며, 산업부는 해수부,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관할 지자체의 지역수용성 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기위원회 심의의견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기위원회 심의 안전에 지

역수용성 정도가 포함돼 있음에도 허가 이후 각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에 맞춰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여전히 지자체 기준과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위원회의 ‘묻지마’ 발전사업 허가가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만 제시할 게 아니라, 각종 인허가 지연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장애요소들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2019 익산 북페스티벌
Book Festival
책으로 탐을 쌓다

2019. 10. 12. (토) 10:00~18:00
모현도서관 및 모현공원 일원

주요행사
개막식, 독서골든벨, 이지성 작가 북콘서트, 독서문화체험마당 등

주최: 익산시립도서관

2019. 10. 12. (토) 10:00~18:00 모현도서관 및 모현공원 일원

개막식 2019 익산 북페스티벌 개/막/식

일시 2019. 10. 12. (토) 10:00
장소 모현공원 메인무대
내용 매직&버블쇼, 시상식, 여태명 붓글씨 퍼포먼스 등

북콘서트 (공유는 다락방), (리듬으로 리드하라)의 저자 **이지성 작가 북 콘서트**

일시 2019. 10. 12. (토) 14:00
장소 모현도서관 시청각실
주제 나를 키우는 성공 독서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p>독서골든벨</p> <p>익산시 독서왕/최후의 1인은 누구?</p> <p>시 간 10:00~11:30 장 소 모현도서관 채육관 대상 초등 3~6학년 사전접수 선착순 70명</p>	<p>동화작가의 방</p> <p>5명의 동화작가와 함께하는 강연 및 체험활동</p> <p>시 간 11:00~15:00 장 소 모현공원 일원 사전접수 선착순 140명</p>	<p>독서문화체험마당</p> <p>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등과 함께하는</p> <p>시 간 11:00~16:00 장 소 모현공원 일원 내용 북아트, 클레이 등 15개 체험부스</p>	<p>BOOK라디오</p> <p>사연과 신청곡이 있는</p> <p>시 간 12:00~14:00 장 소 모현공원 메인무대 내용 사연 소개, OX퀴즈, 책담 발표 대회 등</p>	<p>마당극 공연</p> <p>온가족이 즐기는</p> <p>시 간 15:30~16:30 장 소 모현공원 메인무대 내용 이야기꾼 책공연, '호랑이한테 잡혀먹혔다'</p>	<p>기타 프로그램</p> <p>각종 전시 및 포토존, 북캠핑, 도서할인판매 및 도서교환장터, 책읽는 버스, 특별음악회, 페이스페인팅, 전통놀이마당 등</p>
--	--	--	--	--	---

협력기관: 익산시립도서관협의회, 익산민예총,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